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7일, 박지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5.9.1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9.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지혜 의원)

현재까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관련 사무는 환경부와 산업
통상자원부가 각각 나누어 맡아왔음. 그 결과 에너지 연소 과정의 온

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목표가 에너지 정책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첫 단추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후 정책의 실행력이 그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해당 업무는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영국, 독일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에서는 에너지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에너지 전환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음.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 달성까지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빠른 실행이 중요하므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무와 에너지 사무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조직에서 다루도록 함은 물론이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운영은 물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해당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반도는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특히 평균기온 상승 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환경부의 담당 사무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자원 정책 관련 사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적응을 추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에 따라 검토보고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 독일은 에너지 비용 급등, 제조업 경쟁력 붕괴 부작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서 기후변화대응기능을 분리한 후에 ‘연방경제에너지부’로 되돌린 사례를 감안할 때,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이 중요한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나, 자원부분과 원전수출이 산업통상부에 남은 것은 아쉬움.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는 자원부분을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와 환경 기능 융합 시 에너지 기능 축소가 우려됨.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면 에너지·환경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와 원전 기능이 3개 부로 쪼개지고 있는 문제, 전기감독청 및 전력감독청 등 중립적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 원전생태계 진흥 필요가 있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기후환경과 에너지 분야는 같은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규제부처에서 에너지를 소관하게 되면 전력수급 안정성, 전기요금 인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독일·영국의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에너지와 기후 분야를 재분리한 사례가 있음.
- 기후에너지부가 생기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바, 보강조치가 필요하며, 국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